

대형 건설 프로젝트 수주 돌파구 되나?

김윤덕 국토부장관 단장 한국 정부 수주지원단, 사우디 현지서 K건설 지원활동 나서... 추가 대형 수주 기대

전북 출신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한 정부 수주지원단이 사우디아라비아 현지에서 본격적인 K 건설 지원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대형 수주가 기대된다.

특히 한국과 사우디의 고위급 인사가 직접 면담에 나서는 만큼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실질적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18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김윤덕 장관을 주축으로 한 수주지원단은 15일부터 3박5일간 사우디 현지를 방문, 주택건설과 고속철도 등 분야에서 수주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장관은 사우디 마제드 알 호가일 지방자치추장부 장관과 이브라힘 알 술탄 리아드시왕립위원회 최



고고 있다.

특히 사우디는 우리나라 해외건설 수주 1위 국가로 국내 기업들은 이미 대규모 수주에 성공하며 현지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현대건설은 올해 초 사우디 전력청(SEC)이 발주한 송전선로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총 공사금액은 3억8900만 달러(약

5125억 원) 규모로, 이는 사우디 메디나와 젤라 지역에 각각 건설하는 송전선로 공사다.

지나해에는 삼성E&A와 GS건설이 약 10조원에 달하는 현지 가스 플랜트 공사를 따내기도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수주단 파견으로 신도시와 고속철도 분야에서 추가 수주 기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알 푸르산(Al Furkan) 신도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사업 수주가 기대되며 리야드 동북부 35km 지점에 있는 5만가구 규모 개발(약 200억 달러 추정)이 진행 중이다.

사우디는 2030년까지 주택보급률 70% 달성이 목표로, 현재 12만 가구(약 320억 달러 추정) 규모 키디야(Qiddiya), 2만 가구(약 630억 달러 추

정) 디리아(Diryah) 등 대규모 신도시 기가(Giga)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메디나~메카를 잇는 하라마인 고속철도(약 450km) 차량 공급사업 수주도 기대되며 이는 사우디 철도청이 발주하는 사업으로, 350km/h급 고속철 차량 공급과 유지보수 10년에 약 1조1,000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사업이다. 내년 입찰공고가 나올 예정이다.

김윤덕 장관은 "사우디는 이미 우리 기업의 기술력과 수행 능력을 신뢰하고 있어 신도시·철도 등 메가 프로젝트에서 추가 수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차원에서 지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여느 때보다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강태창 도의원 "전북특별법 개정안 진전 없이 표류중"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군산1)은 특별자치교육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1년이 넘었지만 전



북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번번이 좌절되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를 위한 기반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도민 체감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 실현은 요원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라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제주·세종·강원과 함께 특별자치시·도로 지정되었으나, 과세자주권이 부재한 상황에서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임에도, 전북도는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세종의 단층형 구조를 무비판적으로 벤치마킹해 왔다는 점에서 정책 설계의 오류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태창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전략 부재, 책임 회피, 형식적 대응으로는 전북특별법 개정은 물론 실질적인 자치권 실현도 불가능하다"라며, "이를만 특별자치도일 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권 확대나 재정특례가 없다면 전북도정의 존재 의미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강태창 의원은, 전북 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자치모델 수립, 실효성 있는 재정특례 도입, 도민 체감형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전략 재정집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

김만기 도의원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 손 놓았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만기 의원(고창2)은 전 북자치도 새만금 해양수산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만금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의 추진이 미흡하여 수질개선 목표 달성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7년 수립된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2025년까지 비점저감시설 24건과 LID 시설 10건을 설치해야 하나, 현재 비점저감시설은 17%(4건), LID 시설은 40%(4건)만 설치되어 목표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추가 예산이 약 1,151억원이 필요한데, 전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안이나 재원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재정적 준비가 부실하다고 비판했다. /이만호 기자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전권회 위원장과, 강성희 전 국회의원, 손진영 익산시의원 등 당직자들이 18일 오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형 광역 공공배달업을 도입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공배달업 하루빨리 전북에서도 도입을”

진보당 전북자치도당, “소상공인에게 남은 건 맘과 한숨뿐

일회성 수수료 지원, 결국 대기업 플랫폼의 수익만 늘려줘”

김중훈 경제부지사에 소상공인 2000여명의 서명 전달도

진보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전권회) 소속 전권회 위원장과, 강성희 전 국회의원, 손진영 익산시의원 등 당직자 7명이 18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대변해서 하루빨리 공공배달업을 전북도에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 대기업 플랫폼이 장악한 배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소상공인들의 사투는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의 위기라는 지적이다.

도당은 거대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가 자영업자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배달 중개수수료 6~8%, 결제수수료 약 3%, 배달비 2,800원에 광고비까지 합치면 소상공인이 벌어들이는 매출

의 30~40%가 플랫폼으로 빠져나간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전권회 도당위원장은 “소상공인에게 남은 건 맘과 한숨뿐”이라며 “이대로는 지역경제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사례 발표에서는 더욱 생생한 고통이 전해졌다.

한 치킨집 사장님은 “배민 좋은 일만 시키고 있다”며 이중 가격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털어놓았다. 오프라인 가격과 배달앱 가격을 다르게 받지 않으면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아이스크림 가게의 사례는 더 황당했다.

포장을 모두 끝낸 뒤 고객이 주문을 취소했고, 음식은 그대로 폐기해야 했다. 그런데도 배달앱은 배달비·수수

료·부가세 등을 모두 공제한 뒤 15,000원 중 고작 9,000원만 환불했다. 배달기사가 픽업조차 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서울 ‘뽕겨요’, 경기도 ‘배달대륙’, 대구 ‘내구로’ 등 타 지자체의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전북도 역시 공공배달업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공공배달업은 낮은 수수료, 지역화폐 연계, 광고비 부담 완화, 지역경제 순환 구조 등을 통해 이미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전권회 위원장은 “일회성 수수료 지원은 결국 대기업 플랫폼의 수익만 늘려주는 꼴”이라며 “전북형 공공배달업 이아말로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 돈이 지역 안에서 돌게 만드는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직후, 도당은 소상공인 2천여 명이 참여한 서명지를 김중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에게 직접 전달했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만호 기자

고창군의회 정례회 개최... 올 제3회 추경 등 심의

고창군의회(의장 조민규)는 새로운 공간인 신청사에서 18일부터 12월 18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18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최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14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건 등 총 24건의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일정을 보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오세환)에서 19일부터 27일까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본회의를 열어서

2026년 부서별 시책보고를 받을 예정이고, 12월 1일에는 군정질문이 실시되고 12월 8일 군정답변이 진행될 것이다.

또한, 12월 8일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으로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에 돌입하게 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신)에서는 12월 9일부터 17일까지 부서별 설명을 듣고 면밀하고 꼼꼼한 심사를 진행한 후, 12월 18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경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할 예

정이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등을 끝으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박성만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광 비수기 생활인구 증대’ 방안으로 주제로 ‘스무더운 여름 맞춤 전략’으로 특별한 경험과 교육적 가치를 제공해 비수기 생활인구를 증대할 것, △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창업자와 창업자를 육성하는 로컬 콘텐츠 중점대학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 △겨울철 채움과 비움의 휴식처로서의 고창을 만들기 위해 일과 휴식을 결합한 고창 동계 재충전 프로그램 실시 등을 주장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재명 정부 성공·내년 지선 압승”

민주 도당, 주요 당직 임명으로 조직 정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윤준병 국회의원)이 지난 14일 주요 당직을 우선 임명하며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도당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도민 눈높이에 맞춘 당 운영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임명된 당직자 중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은 임정호 고창군의회 원내대표다. 임 신임 기초의원회 원내대표회의회 회장은 원만한 소통 능력과 협치 경험을 갖춘 인물로, 전반기 고창군의회 의장을 역임한 바 있다. 도당은 ‘임 회장이 14개 시군 기초의회를 하나로 묶는 ‘전북 원팀’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수석대변인단에는 정책 이해도와 소통 능력을 겸비한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다.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은 도내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평가받고 있으며, 서주영 전 JTJV 전주방송 아나운서는 당원·도민과의 공감대 확산을 이끌 소통 전문가로 주목받는다.

대변인에는 전북 청년층을 대표해 온 두 인사가 발탁됐다. 김광훈 장수군의회 의원은 지역 청년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온 활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장승필 전 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은 청년 조직 경험과 현안 대응 능력을 인정받았다.

도당은 이번 인선을 시작으로 당헌·당규에 따른 각급 당직을 순차적으로 임명하며 조직을 정비할 계획이다.

윤준병 도당위원장은 “전북도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든든히 받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수 있는 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지속 가능 임도 조성·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 논의

민주 윤준병 의원, 정책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인욱학술정책재단과 공동으로 ‘지속가능한 임도 조성·관리’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국산림과학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산림경영인·임업인 등 100명 이상이 참석해 임도의 공익 기능과 관리 체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윤 의원은 “임도는 산불 진화, 산사태 예방 등 산림재해 대응의 핵심 인프라”라며 “최근의 임도는 과학적 설계와 친환경 시공을 통해 오히려 산림 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1월 ‘임도의 설치 및 관리



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발표자 수업은 △임도 사업비·기간 현실화 △재난 대응을 위한 산림관리 인프라 재정립

△임도 인근 산불 발화율의 낮은 비중 △친환경적 노선 계획 및 생태 보전 강화 등을 주요 개선 방향으로 제시했다.

전문가 패널들은 임도의 과학적 조성과 체계적 유지관리가 기후변화 시대 산림경영의 필수 요소라며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이만호 기자·정읍=김대환 기자

도, 농촌융복합 우수사례 경진 2개 분야 수상

최우수·장수 레드푸드

우수·고창 질마재푸드

전북특별자치도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제13회 2025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촌융복합 산업지구’와 ‘인증사업자’ 두 분야 모두에서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성과로 전북은 농생명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지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올해 신설된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분야에서는 ‘장수레드푸드’가 최우수상을, ‘인증사업자’ 분야에서는 ‘고창 질마재푸드’가 우수상을 각각 수상했다. 시상식은 11월 18일 서울 SKY31 컨벤션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관계자 및 전국 지자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장수레드푸드는 지역특화품목인 ‘사과, 오미자, 토마토 등’ 레드푸드를 중심으로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이 연계된 6차 산업 거점지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농촌융복합산업의 완성형 모델을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장수군은 지역 농가로부터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융복합가공지원센터에서 음료·디저트 등으로 가공하고, 이를 요리체험장과 직매장 카페에서 체험·판매로 연결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문화관광 연계를 동시에 실현했다.

인증사업자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고창 질마재푸드(영)는 지역에서 재배한 유기농 쌀을 활용해 유아용 쌀과자와 선식 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 생산체계를 구축한 점이 높이 평가되었다. 특히 지역 농가와와의 계약재배를 통해 유기농 쌀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7일간의 독자적 제조과정, 첨가물·알레르기 유발 성분 배제 등 소비자 맞춤형 가공기술을 적용해 제품 품질을 한층 강화했다.

전북도는 2013년 제1회 대회부터 매년 수상하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13년 연속 수상이라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지역자원을 연계하고 농촌경제를 혁신해 온 전북형 농촌융복합산업 모델의 성과로 평가된다. /이만호 기자

전북소방,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 앞둔 현장점검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개통을 앞두고 현지적응훈련과 현장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추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전주완산소방서, 김제소방서, 완주소방서는 고속도로 각 공구 시공사의 협조로 개통 전 현지적응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진입램프·화차로 등 출동로 확인을 비롯해 터널, 졸음쉼터, 휴게소 등 주요 지점의 구조적 특성과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는 데 중점을 뒀다. 전북자치도소방본부는 개통을 앞둔

시점의 현장 여건을 고려해 남정주 IC~석곡터널 일대에서 화재 및 교통사고 등 주요 재난발생시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과 완산·김제소방서장, 새만금전주건설사업단 관계자는 석곡터널 내 제연설비(촉륜팬), 경사경, 헬기 이착륙장 등 핵심 시설을 세밀하게 확인하고, 재난 발생 시 출동로 확보와 초기 대응 절차가 현장에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체계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